

물위로 떠오르는 유통업계 노사갈등

롯데백화점 노조원 농성 안팎

지난 17일과 18일 롯데백화점 노조원 2백여명이 노조위원장 재선거를 요구하며 본점 현관에서 농성을 벌인 사태(〈한겨레신문〉 19일자 14면 1·2판)는 노조 활동을 둘러싼 백화점 등 유통업계의 내부갈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백화점, 대형슈퍼 등 16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유통노조협의회(유노협·의장 박승덕 미도파백화점 노조위원장)는 20일 '롯데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재선거로 새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현재의 롯데노조를 한시적으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

유노협은 결의문에서 롯데노조의 현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반대에도 규약을 개정, 위원장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선거를 실시해 총회 무산을 유발하는 등 비민주적 방법으로 선거를 진행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선 무효라고 지적하고 즉각 재선거 할 것을 촉구했다.

유노협의 이같은 결의는 롯데의 이번 사태가 표면적으로는 노조원들 사이의 대립 양상을 띠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쪽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집행부와 이에 맞서 민주적인 노조를 결성하려는 노조원 사이의 쌓여온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깔려 있다.

롯데의 농성 노조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87년 8월 노조 설립 이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많은 노조원들이 회사쪽의 인사조치와 압력으로 노조를 탈퇴하거나 회사를 떠나야만 했음에도 현 집행부가 이를 묵인해 왔고 △노조 가입률이 다른 백화점보다 현저히 낮은 50%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도 전혀 가입확장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집행부를 비난했다.

또한 전석구(54) 현 위원장이

고객을 향해 깡뚫이 인사하는 롯데백화점 안 내 사원들. 백화점 등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권익 주장은 서비스 우선주의에 항상 묻혀 버린다고 노조원들은 주장한다.



회사밀착 현 집행부에 노조원들 반발 현재 16곳 결성...대부분 비슷한 여건

을 8월말로 정년이 되자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연령을 1년 연장시키는 등 현 집행부가 회사쪽과 밀착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롯데노조의 갈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두곳을 뺀 대부분의 유통업계 노조에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87년 이후 롯데·미도파·뉴코아·현대 등 대형백화점에 노조가 결성된 이래 전국에서 조직된 유통업계 노조는 올 2월 유노협 창립 당시 18개에 이르렀다가 4개가 없어지고 해태유통과 성안백화점(마산)이 새로 조직돼 현재 16개가 가입해 있으나 정상활동을 하는 곳은 미도파·현대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초기에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했던 뉴코아 노조는 노조 사무국장이 89년 7월 한양대병원 노조 파업농성을 격려방문했다 하여 제3자개입으로 고발되고 사업주 쪽이 회사를 여러 개의 법인체로 분리하는 바람에 4백여명의 노조원이 25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다.

또한 지난 9일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총무부 소속의 사장차 운전기사로 발령받아 상근하지 못

하고 있고 일부 반노조 사원들의 총회 무효주장을 관할 서초구청이 받아들여 21일 노조 감사까지 받게 되었다.

한양유통은 노조 등록은 돼 있으나 결성 1주일 만에 회사쪽의 저지로 집행부가 해체됐고 그랜드백화점의 경우 사원들은 '서류상 노조'일 뿐 '노조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신세계는 삼성그룹의 노조 불인정 원칙에 따라 노사협의회의만 구성돼 있고 삼풍·백영·한신코아 등에도 노조가 없다.

박승덕 유노협 의장은 "유통업 자체가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장시간 근무 등으로 노동조건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고객 서비스'라는 이유로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노사가 모두 극도로 경계하는 등 생산직 노동현장보다도 노조활동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노조 관계자들은 그동안 유통업계가 호황에 힘입어 다른 업종보다 높은 임금수준으로 노동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무마해 왔으나 롯데의 이번 농성과등을

고비로 유통업계의 노조활동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과 규모면에서 업계 최고를 자랑하는 롯데가 농성 주도자들을 고발하거나 징계하는 등 강경태세를 취할 경우 유노협을 비롯한 업계 전반의 연대투쟁을 자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김경애 기자〉